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4/ 5 통권 161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티(T)자형 인재가 파이(π)자형 인재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방법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
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
요
-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 감리 결과 및
시사점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
한 증권취득은 집합투자기구의 직접취득에 해당되
지 아니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외부세무조정대상과 성실신고확인무법인(법인세법 제60조, 제60조의 2)〉

법인유형	구체적 내용, 사유	신고의무
중형법인	전년도 수입금액70억원 이상	외부조정
외감법인	주식회사 등 외감대상법인 (자산, 부채, 매출, 인원기준 등)	
조세특례	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	
준비금 등	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준비금 잔액 3억원 이상	
초기법인	설립된지 2년 내 법인 + 당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결정경정	직전연도의 과세표준 결정 · 경정받은 법인	
분할 · 합병	만 3년 이내 합병, 분할합병, 분할 · 분할신설 법인 등	성실확인추가
해외거래	국외사업장 소유 또는 외국자회사 보유법인	
임대업	부동산 임대주업(지배주주 50% 초과+ 임대업매출 50% 초과 등+근로자 5명 미만)	
법인전환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방법 법인전환과, 이를 인수한 다른법인 등	성실확인추가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7호 / 주간 14호

2023. 04. 05.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외부세무조정대상과 성실신고확인인무법인(법인세법 제60조, 제60조의2)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방법	2
C E O 에 세 이	티(T)자형 인재가 파이(π)자형 인재로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된 상품을 수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처리 문의 - 양도담보부채무변제 - 축적계약직 채용시 정부지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정유사 횡재세 도입 관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9 10
직 장 인 Survival	마음이 상했을 때 대처법 10가지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점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점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132, 2022.08.12) -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8156의23이 적용 가능함 (사전법규재산-224, 2022.08.11)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종합안내 포털 개통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증권취득은 집합투자기구의 직접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2
세 무 정 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공익법인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15 19 23
회 계 정 보	-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및 시사점	3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방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개념, 구분	구체적 정의, 범위, 내용, 과세계산 등	규정
배당소득의 정의	자본출자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분배(잉여금 분배, 신탁 재산(펀드 등) 이익분배금,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이익, 국내외 펀드 수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합산방법	$\text{배당금 총액} \times \left(1 + \frac{11}{100}\right) \times \text{다단계 종합소득누진세율}$ - 배당액의 11%(법인세 해당액) - 원천징수된 세액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의제배당> 1. 감자차익 등 2. 무상증자 3. 해산차익 등 4. 합병차익 등 5. 증가지분차익 6. 분할합병차익	주식소각, 자본감소, 퇴사, 탈퇴, 출자감소의 초과차익 법인잉여금의 자본전입방법 무상증자 등(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제외)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잔여재산분배금의 초과차익 (조직변경 제외) 합병시 소멸법인주주 등이 받는 당초불입금의 초과차익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한 경우, 타주주의 자본전입증가지분비율가액 분할, 합병법인의 기존 주주가 받는 분할대가 등의 초과차익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티(T)자형 인재가 파이(π)자형 인재로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21세기는 하이테크·하이브리드 시대다. 하이테크·6T는 정보테크(IT), 나노테크(NT), 바이오테크(BT), 환경테크(ET), 우주항공테크(ST), 문화테크(CT)의 통칭이다. 2진법의 디지털은 21세기 하이테크 기반기술이다. 그것은 나노테크와 바이오테크 등의 진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전자현미경은 작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집어 넣느냐 하는 초미세 기술의 관문이다. 알약 속에 분자크기 만한 로봇을 넣어 암세포를 공격해 치료하는 의술도 전자현미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이브리드는 혼용, 잡종 등으로 번역된다. 잡종 시켜 생육한 생물은 생산성이 좋거나 내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잡종강세라고 한다. 몽골말의 암컷과 당나귀 수컷과의 교잡에 의한 노새는 거친 환경에 잘 견디며 힘도 강하다. 그러나 생식능력은 없다. 또 누에의 서로 다른 품종 사이의 잡종이 발육도 좋고 고치의 품질도 좋다.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두 세포를 융합하여 잡종세포를 만들고 이를 개체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러한 기술은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가능케 한다. 포마토(pomato)는 포테이토(potato)와 토마토(tomato)의 합성어이며 토감 역시 토마토와 감자의 합성어다. 실제로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달려 있다. 무와 배추를 융합한 무추도 있다. 이것들은 거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의 경고 같기도 하다.

하이브리드는 바이오테크 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카드 한 장이 신용카드 기능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카드 노릇도 한다. 이러한 카드를 하이브리드 카드라 한다. 하이브리드 카에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가 함께 장착된다. 출발할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평지를 주행할 때는 엔진과 모터가 번갈아 돌아간다. 제조부터 폐기 단계까지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기술(LCA, Life Cycle Assessment)을 적용한 자동차도 나올 전망이다.

통신, 소통, 방송, 음악, 영화 등 모든 콘텐츠가 결합되어 손바닥 안에서 즐기는 세상이 됐다.

나라의 경우도 융·복합이 순조롭게 일어나야 생존력이 강하다. 중국이란 거대 생명체에는 독특한 문화 유전자가 있다. 그게 바로 ‘융합문화’의 총화인 거대 용광로 같은 중화사상이다. 중화는 ‘하이브리드 문화’의 표징이다. 순수 혈통적이지 않다. 그들을 지배했던 칭기스칸의 몽고족이나 청나라 만주족을 아예 녹여버렸다. 한국도 대륙과 섬나라 문화가 융합되는 것이 유리한 비빔밥 같은 반도국가다. 비빔밥은 먹는 사람이 비벼서 새 맛을 내도록 되어 있다.

기업도 순혈주의를 버려야 한다. H그룹 출신 경영자가 S그룹의 CEO가 되어야 한다. 또 외국인인 한국기업의 CEO가 되는 하이브리드 경영을 꾀해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인재상은 티(T)자 형이었다. 한 분야를 깊이 파서 전문가가 되고 주변지식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족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한국에서는 파이(π)자형 인재가 중요하다. 최소한 두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그들 간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하이브리드 인재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24일 (금)	3월 27일 (월)	3월 28일 (화)	3월 29일 (수)	3월 30일 (목)
미	달 러 (USD)	1287.20	1289.70	1300.30	1297.40	1299.30
일	본 엔 (JPY)	984.21	986.27	989.54	991.40	979.09
영	국 파 운 드 (GBP)	1581.13	1579.17	1598.26	1600.34	1599.57
캐	나 다 달 러 (CAD)	938.02	939.26	951.76	954.01	958.26
홍	콩 달 러 (HKD)	163.99	164.30	165.65	165.28	165.52
중	국 원 (CNH)	187.39	188.68	188.91	188.61	188.77
유	로 화 (EUR)	1394.42	1389.72	1404.58	1406.51	1408.57
호	주 달 러 (AUD)	859.85	857.65	865.15	869.84	868.13
싱	가 폴 달 러 (SGD)	969.86	968.35	976.93	977.22	977.3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1.35	291.26	294.09	294.76	294.06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수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Q**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A사는 10월 국내판매 등을 목적으로 B사로부터 제품을 1,000개 구입하였습니다. 11월 중 500개를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0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설) 영세율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건에 해당하므로 500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세법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10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수출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A**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처리 문의

- Q** 퇴직자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1년 5백만원까지 비과세하며,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로 22% 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경우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소득구분 및 과세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A** 현행 세법에는 종업원등이 퇴직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상속과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된다면 지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양도담보부채무변제

Q 당사는 법인이고 채권자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A의 양도 담보물을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자산, 부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1. 양도담보된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년도가 2000년대로 표시되는데 내용연수 문의(기계 장치 10년 정액 또는 경제적 실질반영 등)

Q2. 양도담보부채무로 소유권 이전한 기계장치 계정문의(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기계 장치로 처리)

Q3. 미변제 채무와 양도자산의 변제 회계처리 문의(양도자산 채무/미변제 채무 변제 처리 가 맞는지)

Q4. 혹시 위 사례의 경우 별도로 추가될 회계처리가 있는지

A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라 양도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온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신규자산과 동일 하게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되며, 내용연수는 중고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중고자산 도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중고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정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촉탁계약직 채용시 정부지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Q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정부지원금을 300만 원/인당 수령하였습니다.

회사가 받는 정부지원금 수령액에 대해 회계처리 시 잡이익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촉탁계약직 분들의 급여비용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A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반환의무없는 지원금은 영업외이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며, 촉탁직 급여 에서 차감하는 순액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증액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상담실 백종훈 차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부담할 세액을 신고한 후에 그 신고내용에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를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부담세액이 증가하는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라 하고, 과세표준이나 부담할 세액이 감소되는 정정신고를 경정청구라 한다.

따라서 이번 202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과세표준의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증액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기법 별지 제16호 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 신고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3278, 99. 8. 20).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는데, 우선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의 10%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에 가산하며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① 미납기간에 따라 하루 0.022%로 계산한 금액에 ② 미납세액의 3%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납부할수록 가산세가 늘어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50%, 6개월 초과후부터 1년내는 30%,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대상이 된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로 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경정청구의 절차는 경정청구 기한내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행위에 확정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국세불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절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국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분	세정지원 대상
• 수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해외 ETF에 대한 과세

구분	매매 차이	분배금	비고
해외 상장(투자회사형)	양도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배당소득세율 15.4%
국내 상장(신탁형)	배당소득 (보유기간 과세)	배당소득	



정유사 횡재세 도입 관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구분	이성만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양경숙의원안
명칭	초과소득세	초과이득세	초과소득세
대상	① 석유정제업자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① 석유정제업자 ② 은행	①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②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소득금액 120%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과세요건	① 초과소득 5억원 이상 ②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초과이득	초과소득
세율	20%	50%	20%
세수	일반회계	초과이득공유 기금	일반회계
유효기간	-	~2024. 12. 31.까지	~2025.12.31.까지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장소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 동의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 전 :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통보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마음이 상했을 때 대처법 10가지

1. '참자!' 라고 생각하라.

감정 관리는 최초의 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욕'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 일단 참아야 한다.

2. '원래 그런 거.' 라고 생각하라.

누군가 속을 상하게 할 때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라.

3. '웃긴다.'고 생각하라.

괴로울 때는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고뇌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간다.

웃기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라.

4. '까짓 것.'이라고 생각하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좋다. 까짓 것.'이라고 통 크게 생각하라.

크게 마음 먹으려 들면 바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5.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라.

역지로나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저럴 거야.'이라고 생각하라.

6. '내가 왜 너 때문에.'라고 생각하라.

나만 속을 끓인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 그렇게 생각하라.

7. '시간이 약'임을 확신하라.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별 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8. '새옹지마'라고 생각하라.

'세상 만사 새옹지마'라고 생각하며 심적 자극에서 탈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라.

09.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라.

괴로운 일에 매달리다 보면 한없이 속을 끓이게 된다.

즐거웠던 지난 일을 회상해 보라.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

10.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라.

괴로울 때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 보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 보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증권취득은
집합투자기구의 직접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132, 2022.08.12

질 의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1971, 2022.05.17

질 의

- 신청인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 및 관련인은 아래와 같음
- 을은 갑, 병, 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친족관계)가 아니며, 병과 정은 비영리법인 및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사용인 및 주주가 아님
- 을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병과 정에게 저가로 양도하고자 함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무기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법규재산-208, 2022.03.30

질 의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 이후에도
- ①양도 당시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②양도일까지

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해야 하는지, ③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❶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유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사전법규재산-224, 2022.08.11

❷ 질 의

- (질의1) 1주택, 1상가 조합원입주권을 순차 취득한 후 상가분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 (질의2) 질의의 특례가 적용될 경우,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상가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

vs.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질의3) 질의의 특례가 적용될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령 §154①(4)(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자진말소 후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할 때 소득령 §154①에 따른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❸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뒤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주택(A)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 종합안내 포털 개통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4일부터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 가능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

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한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한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연장 조치로 10월4일까지 분납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등에 열거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기업집단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는 법인은 원래 법인세 신고납부를 3월말이 아닌 5월2일까지 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 기획재정부, 2023. 3

1 주요 개정내용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③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④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투자세액공제율(%) 〉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2

추진배경

-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추세로,
 -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어로 해소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였으나,
 -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Delta 3\%p \rightarrow \Delta 1\%p$),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특히 금년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에서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는바,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 : (산은) $\Delta 5.1$
 - ** '23년 설비투자 전망(%) : (한은) $\Delta 3.1$ (산은) $\Delta 2.6$

3

기대효과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Delta 3.3$ 조원('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되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

구 분	우리나라	대 만	미 국	일 본('23.4~)
설비투자	25~35%* * (당기분)15~25% + (증가분)10%	5%	25%	-
R&D비용	30~50%	25%	20%(증가분)	(대)6~10%, (중 소)12%

< 세액공제율 상향 >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

공제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됩니다.

-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되며,
-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도 금년 한 해 한시적으로 현재 3~4%에서 10%로 대폭 상향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함으로써, 일반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와 전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한시 상향*하여,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당기분(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 증가분: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특히,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 10, § 24)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범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 세액공제율					○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5	10	3	일 반	3	7	12	10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신성장 ·원천기술	6	10	18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국가 전략기술	15	15	25	4	국가 전략기술	15	15	25	

<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국세청, 2023. 4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text{안분율} = \left(\frac{\text{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법인수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개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4만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1.3만개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세법」 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713, 9726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21년 11.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21년 8.4조원)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2년 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지방세법」 개정('23.3.14.)에 따라 '23년 소득('24년 신고)부터는 변경된 과표구간·세율 적용
(개인) 1,200만/4,600만/8,800만원 → 1,400만/5,000만/8,800만원 / (법인) 각 구간별



0.1%p 인하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 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 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 국세청, 2023. 4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1차 교육(4. 7.) | 접수: '23. 3. 30.~3. 31. ■ 2차 교육(4. 10.) | 접수: '23. 4. 3.~4. 4.

■ 3차 교육(4. 12.) | 접수: '23. 4. 5.~4. 6. ■ 4차 교육(4. 14.) | 접수: '23. 4. 7.~4. 10.

* (신청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온라인 세법교실 > 참가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결산서류 등 공시)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기부금단체 추천/보고>의무이행 보고
 -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소규모 공익법인 : ①~③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①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②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③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중규모 공익법인 : ①~④ (총자산 5~100억 원 or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 ①~⑤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2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1 공익법인 종합안내포털 개통

-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납세불편해소분과」 대표과제
-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2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 확대

- ☐ (미리채움 확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서식의 유사·동일한 항목을 중복하여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미리채워* 주어 편리하게 공시 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출연재산 보고서 「이사 등 선임명세」 작성 → 공시서식 「이사 등 구성원 현황」을 미리채움
- ☐ (오류알림 강화) 공익법인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알림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알림창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알림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동영상과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세법교육 확대

- ☐ (온라인 세법교실 확대)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



을 개설한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합니다.

- 올해는 더 많은 공익법인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회차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교육 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동영상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겠습니다.
- * (접근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납세자 세법교실 > 동영상 교육자료 > 법인세 > 공익법인 신고실무

- (신규 공익법인 교육 개설) 올해부터는 신규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세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익법인이 설립·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과 전용계좌 개설·신고 등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신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올해부터 재공시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오류점검이 강화됩니다.

- (재공시 내역 공개)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현행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개선내용)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되오니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편공시 대상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가산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적용 예정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분도 '23. 5. 3. 이후에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공개됩니다.
- (공시오류 점검 강화) 국세청은 '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공시내역을 분석하여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 * 기부금·보조금 과소신고,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누락, 기부금 지출명세 부실기재 등

-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 공익법인이란 (상증법시행령 §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사업 유형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세법§24②1호의 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⑥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따른 공익법인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⑦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 사내근로복지조합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
-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제



참고 2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78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1억 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78 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x 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51, \$78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②, \$78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② 100만 원 (1억 원 한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③, \$78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 (제출) 감사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상증법 \$50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가액 1천억 이상 •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상증법 \$48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제출) 의무이행신고서 등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1억원 한도)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78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금액의 0.5% • 미신고시 ①,② 중 큰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 \times B \div C) \times 0.5\%$ A: 공익수입금액 B: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일수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법인령 \$39⑥ ·\$38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의 경우 명단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령 \$39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고시단체[법인령\$39①(1)(바)]의 경우 지정취소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법법 \$75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120의3, 법법 §121, 법법 §75의8, 부법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	---	---	--

□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1), 상증령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 금액, 3 년 이후 사용중단 금 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4) (5), 상증령 §38④⑦, 상증법 §78⑨(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 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 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 미달 사용금액 •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1년 이 내 30%, 2년 이내 60%) × 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3) (5), 상증령 §38⑤⑥, 상증법 §78⑨(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 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 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여야 함 * '22.1.1.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성실 공익법인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text{출연재산평가액} \times \frac{\text{목적외사용금액}}{\text{운용소득금액}}$ •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 10%
주식 출연 제한	상증법 §16②, 상증법 §48①, 상증령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 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취득 제한	상증법 §48②(2), 상증령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 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10%, 20%) 초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 액

주식 매각 의무	상증법 §49, 상증법 §78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12. 31.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 까지 매각하여야 함 - 5%~20% 이하: 3년 이내('99. 12. 31.) 처분 - 20% 초과: 5년 이내('01. 12. 31.)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5% 초과 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 ×5%(부과기간: 10년) ·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계열주식 보유한도	상증법 §48⑨, 상증법 §78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30%(50%) 초과 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 × 5% ·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상증법 §48②(7), 상증법 §78⑨(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 원칙: 출연재산가액 1% 이상 - 동일주식 10% 초과: 출연재산가액 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10% *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⑧, 상증법 §78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⑩, 상증법 §78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 비용 - 팸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③, 상증법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 낮은 가액으로 사용 ☞ 차액이 증여가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상증법 §48②(8), 상증법 §38⑧(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 가액·이익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②(8), 상증법 §38⑧(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제출의무	법법 §75의4 법법 §112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	-----------------------------	--	---

참고 3 - 공익법인(일반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종교 제외)
- ② (기재부지정 일반기부금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법인세법상 이행해야 할 의무

구 분	내 용
1. 정관요건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2. 공익목적 사용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5④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선거운동 금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고유목적사업 지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전용계좌 사용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공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8. 회계감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③ 및 ④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 명단공개
- ② (기재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

붙임 4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기부금 명칭 변경

- (개정내용)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명칭 변경
-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법인세법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24②1호 각 목의 기부금(소득의 50% 한도 손금) ○ 법인세법 §24②2호 각 목의 기부금(소득의 10% 한도 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공익법인 합리화

- (개정내용)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
- (적용시기) '23. 2. 28. 이후 보고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법인세법 시행령 §39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 (개정내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
- (적용시기) '23.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⑤	○ (신 설)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포함) -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 (개정내용) 공익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추가
- (적용시기) '23. 2. 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2③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 회계감사기준·회계기준 위반으로 통보된 자 - (추 가)	(좌 동) -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 합리화

-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한 경우,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
- (적용시기) '23. 2. 28. 이후 가산세 부과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조의4⑪	○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 ○ (추 가)	○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붙임 5 - 주요 서식 개정사항

결산서류 공시 서식

-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유형별 구분 작성
 -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수혜단체)/자산 취득/운영경비로 지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 ① 수익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작성법 변경
 - 세법상 소득금액을 회계상 손익으로 변경하여 공시 서식과 작성방법 동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구분	⑮ 합계 (⑮+⑮+⑮+ ⑮+⑮+⑮)	기타사업								⑮공익 목적 사업	
		사업손익							⑮ 사업 외 손익		⑮고유 목적사 업준비 금환입 (전입)
		금융			부동산			⑮ 기타			
		⑮ 소계	⑮ 이자	⑮ 배당	⑮ 기타 금융	⑮ 소계	⑮ 임대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② 매각대금 지출 명세 신설

-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를 작성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⑮(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⑮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지출목적	⑮지출액
⑮합계			

③ 운용소득 지출 명세 신설

- －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를 작성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⑮(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⑮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지출목적	⑮지출액
⑮합계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⑮(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⑮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지출목적	⑮지출액
⑮합계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3. 3

-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 분	2023. 4. 1.(이전)	2023. 4. 1.(이후)
-----	-----------------	-----------------

열 람 기 간	계약일 이전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 요	① 계약일 이전 필 요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 요*
신 청 기 관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열 람 범 위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신 설>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기획재정부, 2023. 3

주요 내용

- (실적) 금융감독원이 '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표본 98사, 협의 49사)
 - 전년도 실적과 비교(5사 감소, △3.4%)하여 큰 차이는 없었는바, 이는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
-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p 증가(표본 심사감리 35.7%, 협의 98.0%)
- (위반동기) 고의(10.8%) 및 중과실(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
 -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28.2%('20년) → 25.3%('21년) → 21.6%('22년)
-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21사, 공인회계사 69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시사점)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임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I

분석대상

- 금융감독원이 '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 완료
 -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음(5사 감소, △3.4%)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단위 : 사, %)

구 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심사·감리	79	103	98	△5	△4.9
혐의심사·감리	44	49	49	-	-
합 계	123	152	147	△5	△3.4

(참고) 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 ◆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정공시 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II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 상장회사

위반건 등

- (전체) '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83사)과 동일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26사(50사 중 52.0%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7사(97사 중 58.8% 지적)
- (지적률) '22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
-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 ÷ '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47사)
 - 표본 심사·감리 건이 소폭 감소(103사 → 98사, 5사↓)하였음에도 총 위반 건(83사)이 동일하여 전체 지적률은 소폭 상승하였는바,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공시하고자 하는 회사 및 감사인의 노력 필요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4.3%('20년) → 34.0%('21년) → 35.7%('22년)
 -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97.7%('20년) → 98.0%('21년) → 98.0%('22년)

〈심사감리 종류별 위반비율〉

(단위 : 사,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35	35	35	-
	지적률	44.3	34.0	35.7	1.7
혐의	회사수(위반)	43	48	48	-
	지적률	97.7	98.0	98.0	-
합 계	회사수(위반)	78	83	83	-
	지적률	63.4	54.6	56.5	1.9

- (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57.7%(전체 26사 중 15사 지적), 테마는 23.5%(전체 51사 중 12사 지적), 무작위는 38.1%(전체



21사 중 8사 지적)

-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는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7.9%) > 무작위(37.8%) > 테마(23.9%) 순

(참고)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 ①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 ② 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 ③ 무 작 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표본 심사대상 선정방법별 위반현황〉

(단위 : 사, %)

표본 선정방법		'20년	'21년	'22년	3년 기준*
위험요소	회사수(위반)	21	17	15	53
	지적률	72.4	43.6	57.7	57.9
테마	회사수(위반)	9	11	12	32
	지적률	24.3	23.9	23.5	23.9
무작위	회사수(위반)	5	7	8	20
	지적률	38.5	36.8	38.1	37.8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산,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위법행위 유형별

-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사(전체 83사의 75.9%)로 전년(60사, 72.3%) 대비 3사(3.6%p) 증가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80.8%('20년) → 72.3%('21년) → 75.9%('22년)

-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5사('20년) → 23사('21년) → 20사('22년)

(참고)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 ① A유형 :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 ② B유형 :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③ C유형 : 위법행위가 주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 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④ D유형 : 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 ~ 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 유형별 지적 현황〉

(단위 : 사, %)

위반유형		'20년	'21년	'22년	3년기준**
A 유형*	회사수(위반)	63	60	63	186
	지적률	80.8	72.3	75.9	76.3
기타	회사수(위반)	15	23	20	58
	지적률	19.2	27.7	24.1	23.7

- * 지적유형이 A유형과 기타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회사는 A유형으로 분류
- ** 유형별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 (위반건수 분포) '22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평균** 2.2건)

-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 '22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79건)를 위반회사(83사)로 나누어 산정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사
-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22년)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합계
회사 수	34	24	15	5	5	83

위법행위 동기별

- (고의·중과실) '22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은 9사(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 전년(12사, 14.5%) 대비 3사(3.7%p) 감소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28.2%('20년) → 25.3%('21년) → 21.6%('22년)



-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71.8%('20년) → 74.7%('21년) → 78.4%('22년)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단위 : 사, %)

위법행위 동기		'20년	'21년	'22년	3년 기준*
고의	회사수(위반)	14	12	9	35
	비율	17.9	14.5	10.8	14.3
중과실	회사수(위반)	8	9	9	26
	비율	10.3	10.8	10.8	10.7
과실	회사수(위반)	56	62	65	183
	비율	71.8	74.7	78.4	75.0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비율은 각 연도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

과징금 등 조치

-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16.0억원('22년)
-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사, 억원)

과징금	'20년	'21년	'22년
부과 회사 수	17	14	14
부과 금액	94.6	159.7	223.5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5.6	11.4	16.0

- (수사기관 통보 등) '22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 권고(11건)는 총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2년도 1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0%) 감소
- * '22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37건('20년) → 30건('21년) → 21건('22년)
 -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 * 동 심사결과는 ①해당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되고, ②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등 회계감독업무에 활용
 - 한편,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3건 감소
 -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35.1%('20년) → 33.3%('21년) → 33.3%('22년)
 -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매년 부과금액이 지속 증가*
 -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 8.4억원('21년) → 21.1억원('22년)
- (공인회계사) '22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
-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하였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명) 대비 1명(1.5%) 증가

〈상장회사 감사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조치 현황〉

(단위 : 사, 명, %)

구 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법인	37	30	21	△9	△30.0
공인회계사	95	68	69	1	1.5
법인당 평균	2.57	2.27	3.29	1.02	44.9

※ 회계법인은 조치 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 수 기준



시사점

①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 유도

- 중대 위반(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조치 중인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② 감사인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감사인 조치 건수 추이 : 37건('20년) → 30건('21년) → 21건('22년)

** 감사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 8.4억원('21년) → 21.1억원('22년)

③ 심사·감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금감원도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 추진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6개월씩 연장 가능

➡ 新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이므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도 회계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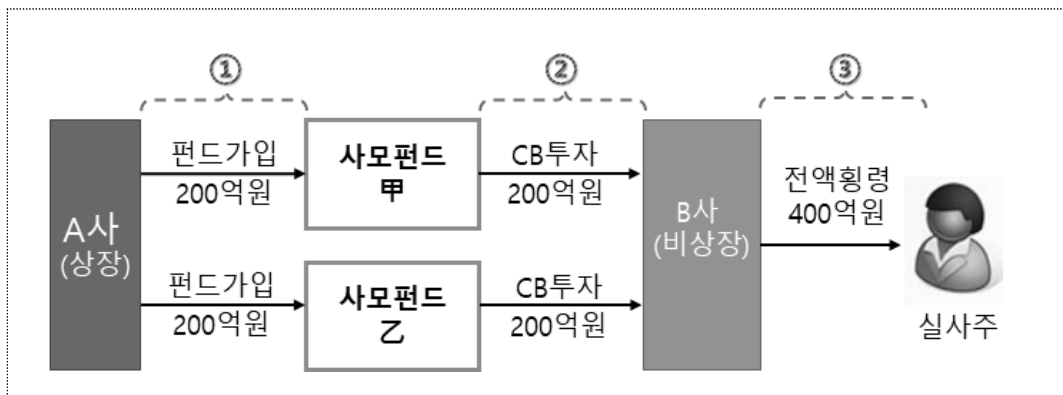
참고 - 심사·감리결과 지적사례

1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및 금융자산 과대계상

- (지적내용) 상장회사 A의 실사주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 ①A사가 사모펀드 甲, 乙*에 400억원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 * 증권업 전문가에 의해 회사자금 유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회사는 동 펀드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함
- ②동 사모펀드를 통하여 실사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도록 한 후, ③동 자금을 투자 당일에 전액 실사주에게 송금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
 - * 완전자본잠식상태로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 A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사모펀드들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거래구조]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회사관계자),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

2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 (지적내용) C사의 경영진은 전환사채를 중복으로 발행*한 후 동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용하였는바,
 - * 既 발행된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발행하여 유통
- C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임직원 대여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 *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법원은 중복발행된 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받고 시부인 과정을 거쳐 일정액을 회사의 부채로 인정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퇴직자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



3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 ☐ (지적내용) D사는 자가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개 호실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호실은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호실은 제3자에게 사무실·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는 바,
- 제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으 며,
 - 최초 취득 이후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재평가 차액을 투 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아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 소계상함
- ☐ (조치내용) 금감원은 D사에 주의 조치

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 ☐ (지적내용) E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문단34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 주요 고객인 F사 및 G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 단일 외부고객 수익이 전체 수익의 10%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동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
- ☐ (조치내용) 금감원은 E사에 주의 조치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 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 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 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 다. (후 략)